

교부세 광주시 133억·전남도 114억 늘어난다

사회복지 수요 많고 출산율 높은 지역 더 배분 행자부 내년부터 ... 지자체 재정 운용 큰 도움

정부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등에 교부세를 더 배정하기로 했다.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에 진입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전남도가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 인구 과소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제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선정 개선 그리고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방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37조5000억원에 이르며, 특히 국고 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부재원이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17년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현행 23%에서 3% 포인트 인상할 경우 추가되는 약 4327억원의 재정 수요는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보다 많이 소요되는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133억원, 전남은 22개 시·군을 제외한 도 본청만 114억원의 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고령군의 경우 18억원의 예산이 더 주어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356억원을 배정해 해남군의 내년 교부세가 5억원 인상된다.

행자부는 ▲출산장려 수요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그 정책 효과 및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하여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수요, 낙후지역 선정지표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각각 1076억원, 637억원, 2662억원의 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향후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일부 여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1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추진해 12월말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 참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문화전당 콘텐츠 확보 ‘문화수도’ 자리매김해야”

광주광역시 30년 ‘문화산업’ 새 도약대로

광주비엔날레 ‘예술도시 광주’ 해외 홍보 성공 문화산업 업체 영세·종사자 수 적어 해결 절실

광주는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문화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되는 전기를 맞았다. 문화예술회관이 지난 1991년 개관함으로써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규모 문화공간을 확보했다. 미술인들은 전용 전시공간을 고대했던 속을 풀었다. 시립미술관이 지난 1992년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은 광주미술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선 원년이다. 당시 기념조각 생소한 비엔날레가 창설된 것이다. 제1회 광주

비엔날레는 현대미술축제의 새장을 열었다. 광주비엔날레는 올해 행사까지 매회 시대적 이슈와 문화담론을 시각문화로 승화시키며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비엔날레는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창설의 동력이 됐다. 지난 2005년 1회 행사를 치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광주는 문화도시

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 지난 2005년 발효된 데 이어 옛 전남도청에서 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광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는 그동안 대대적인 인프라를 확보했지만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 전시·공연 등 문화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를 예술도시로 해외에 알리는 데 성공했지만, 해외 관람객 등을 끌어 모으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관객을 흡인하는 대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디자인비엔날레 역시 행사 개최효과가 지역 디자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반적 평가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크고 작은 전시·공연 프로그램으로 국내

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채롭고 실험적인 공연물을 무대에 올려 새로운 선보였지만, 관객수요 창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 문화산업이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다. 광주 문화산업의 현주소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광주지역 문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광주의 문화산업 규모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0%씩 커지고 있지만, 업체당 종사자 수나 매출액은 광역시 중 가장 낮아 매우 영세하다는 것이다. 2007년 이후 문화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증가율도 10.7%, 6.7%, 9.6%로 광역시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문화산업 업체당 종사자 수도 7.3명으로 부산과 함께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춘수 시의원, 1회용품 환경오염 대책 촉구

광주시의회 박춘수(국민·남구 3)의원은 3일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재질인 1회용 컵과 1회용 면도기가 하루 평균 4만개, 연간 1500만여개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소각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회용 컵과 면도기를 매립시 토양오염과 소각시 대기오염



의 원인이 된다”면서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자체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이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주문했다.

조세철 시의원,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조세철(민·동구) 부의장은 3일 열린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공원은 25개소, 예산은 2조 7000억원으로 남은 시간동안 매년 6750억이 있어야 일몰제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시에서는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 일정 면적인 70% 이상 기부채납 할 경우, 아파트 등 택



지로 개발하는 건축허가를 인정했지만, 이 대책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후 방관으로 기부채납율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철홍 도의원, 사후면세점 활성화 방안 시급

전남도의회 박철홍(민·담양 1) 의원은 3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에서 곧장 면세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도내 사후면세점 대부분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재 도내 사후면세점 수는 182개로, 목표 특화거리에 위치한 사후면세점 98곳의 매출액(연간 3500만원)만 파악하고 있



을 뿐 나머지 84곳은 매출과약자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서 곧장 면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급 단말기와 여권 리더기 설치를 위한 5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승희 도의원, 전남복지재단 후보추천 규정 개정을

전남도의회 우승희(민·영암1) 의원은 3일 “전남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광대석 대표이사 후보 추천과정에 구성된 전남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재단이사 3명이나 포함돼 있었다”면서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복지재단 정관 제8조상 임원추천위원회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2인,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해당기관은 이사회 추천 2인에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압도적인 프리미엄의 시작

11월 4일 OPEN

대광로제비앙

토지계약 100% 완료

지구단위계획 사전심의완료

코리아신탁 자금관리

4Bay·4Room 혁신설계(일부제외)

84㎡·66㎡ A·B 총 352세대

문의 062) 369-0004

지하철 2호선 금호역

광주 안평 계속 교통망

충만한 학군과 학원가 형성

친환경 단지구성

금호지구의 新프리미엄 시대를 열다

금호지구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규 명품 아파트에서 광주를 압도하는 교통과 자연, 교육에 남다른 품격까지! 광주에 없었던 압도적인 프리미엄이 찾아옵니다.